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권·권한이양이 핵심”

광주연구원·전남연구원, 통합선언 후 첫 정책토론회
정부서 산업·문화·분권 이양받아야...특별법이 ‘성패’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의 기반이 된 통합을 위해선 일대일 대응 통합, 상향식 통합,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통합의 주요 쟁점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 통합 선언 후 열린 첫 토론회로, 김 단장은 통합의 기본 원칙, 자치단체 종류, 특별법안 구성, 특례 유형, 교육자치, 행정통합의 미래상 등 6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통합의 기본 원칙을 ‘소외 없는 상생’과 ‘지방 분권’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과정에서 취약계층이나 낙후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별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과 분권형 통합 원칙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합모델로는 ‘특별시’를 제시했다.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합치지만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김 단장은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존되어야 한다”면서도 “향후 광역과 기초의 사무 배분과 기능조정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권한 이양 특별법 제정도 필수과제로 꼽았다.

대구·경북, 대전·충남처럼 파격적인 특례를 담은 종합특별법이 마련돼야 하고, 중앙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 여부가 통합의 실효성을 가를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특별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특례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 주요권한을 이양받거나 시행령 사



7일 광주 서구 치광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주요쟁점’ 발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항을 지방조례로 전환하는 구조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에 대해 행정통합과 시너지를 낸다면 통합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래상으로는 3개 권역별(광주권·서부권·동부권) 특화발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행정통합을 진행 중인 각 지자체 연구원들도 패널로 참

여해 지역별 추진 현황 및 주요 사안을 공유하며 광주·전남의 특수성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은 이번 토론회

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이 제도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지역 발전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주철현 “행정통합, 주민투표 전제돼야”

“통합 필요성 공감하지만 절차 없는 속도전은 안돼”



리 시급하더라도 주민투표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절차를 생략한 통합은 시작부터 갈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 자체보다 결정 과정의 민주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주 의원은 주민투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두 달이면 충분하다”며 “선거법상 논란을 피하려면 4월 3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사진)이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 동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를 건너뛰 추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라면서도 “통합을 결정하는 주체는 행정부나 정치권이 아니라 시·도민”이라고 말했다. 헌법이 규정한 국민 주권 원칙을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근 통합 논의가 속도 위주로 흘러가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아무

전남도지사·교육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대회의실에서 전남도지사 및 도교육감선거에 참여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

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정치자금 사무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입후보예정자들의 적극적으로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150t급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총사업비 75억 투입...설계비 국비 4억 확보



전남도는 전남 해역의 부유·침적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설계비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

국비를 확보한 해양환경정화선은 인양틀과 크레인 등을 갖춘 150t급 전용 수거선으로, 총사업비는 75억원(국비 50%·도비 50%)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은 국내 수산물 생산량 1위 지역으로, 긴 해안선과 다수의 도시를 보유해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외국 유입 쓰레기와 바다에 침적된 폐기물도 지속해서 늘면서 정화선을

활용한 상시 수거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운영 중인 정화선은 1997년 건조돼 선령이 28년에 이르는 노후 선박으로, 수거 능력과 안전성에 한계가 있어 대형·침적 해양쓰레기 대응과 안정적 정화 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전남도는 해양수산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을 이어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비 확보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설계 단계부터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부유·침적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이고, 노후 정화선 대체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정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안과 도서지역 해양환경 개선은 물론 해양생태계 보전과 여장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규 정화선 건조로 현장 대응 역량과 수거 효율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화선의 체계적 운영으로 전남의 해양환경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환자의 몸은 말하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막혀버린 흐름, 미세한 변화
환자의 몸은 수액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언어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습니까?
아이링거는 그 들리지 않는 대화를 데이터로 번역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통역가입니다.



(622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 중앙로 42 (오선동)
본사 Tel. 062-954-0627 Fax. 062-954-0620
연구소 Tel. 062-972-0629 Fax. 062-972-0629